

목 차

I. 제1회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일정 안내

II. 고양시 청소년 자치기구 소개

- ① 고양시청소년의회
- ② 고양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III. 고양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정책제안서

- ① 인권분과 : 고양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
- ② 교육분과 : 고양시 청소년이 알아야할 권리
“다 함께 만들어가는 성교육”
- ③ 문화분과 : 정치인과 청소년 만남의 광장, 금연벨을 올려라
- ④ 안전분과 : 바닥신호등

IV. 고양시청소년의회 5분 자유발언

- ① 인권위원회 : 학원폭력
- ② 교육위원회 : 자유학년제
- ③ 문화위원회 : 학교 내 자율동아리 지원
- ④ 안전위원회 : 고양시 청소년이 안전한 거리

I. 제1회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 일정 안내

□ 개 요

- 일 시 : 2017년 9월 16일(토) 10:00~12:00
- 장 소 : 고양시의회 3층 본회의장
- 대 상 :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30명, 차세대위원회 20명
- 주요내용 :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원 뱃지수여식, 청소년의회 본회의
(정책발표, 질의응답, 의원 5분 자유발언, 정책표결 등)

□ 주요 행사내용

- 주요행사 및 시간계획

시간(소요시간)	행사내용	장소	비고
09:00~09:20 (20)	출석체크, 입장안내, 셋팅 및 준비	고양시의회 본회의장	
09:20~09:55 (35)	본회의 라하설		
09:55~10:00 (5)	청소년의회 뱃지수여식		
10:00~10:05 (5)	개회선언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
10:05~11:00 (55)	정책제안발표(3개 안건) 심의보고(검토사항 보고) 및 질의응답 〈인권, 교육, 문화〉		고양시청소년 차세대위원회& 고양시청소년의회
11:00~11:15 (15)	정회		
11:15~11:30 (15)	정책제안발표(1개 안건) 심의보고(검토사항 보고) 및 질의응답 〈안전〉		고양시청소년 차세대위원회& 고양시청소년의회
11:30~11:55 (25)	5분 자유발언 (4건) 〈인권, 교육, 문화, 안전〉		고양시청소년의회
11:55~12:00 (5)	마무리발언, 산화선언		고양시청소년의회 의장

Ⅱ. 고양시 청소년 자치기구 소개

① 고양시청소년의회

가. 고양시청소년의회 추진 배경 및 목적

고양시 조례 제 1834호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고양시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나. 고양시청소년의회 모집

- 1) 모집방법 : 공개모집 및 추천(사회배려청소년)을 통한 선발
- 2) 모집기간 : 2017.04.26.~07.09

다. 고양시청소년의회 구성

- 1) 인 원 : 고양시 청소년(만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30명
- 2) 성 비 : 남자 11명, 여자 19명
- 3) 지역분포 : 일산서구 15명, 일산동구 10명, 덕양구 5명
- 4) 연령분포 : 만 12세 1명, 만 13세~15세 21명, 만 16세~18세 8명
- 5) 교급분포 : 초등학교 1명, 중학생 21명, 고등학교 6명, 학교 밖 2명

라. 고양시청소년의회 활동 현황

- 2017.07.15.(토) 청소년의회 의원 선발 면접
- 2017.07.22.(토) 청소년의회 오리엔테이션
- 2017.07.26.(수)~27.(목) 고양시청소년의회 위촉식 및 기본교육
- 2017.08.04.(금)~08.05.(토) 자치기구 연합워크숍 (1박2일)
- 2017.09.02.(토)~09.15.(금) 청소년정책제안 검토, 5분 자유발언 준비 작성
- 2017.09.09.(토) 청소년 의회 '본회의'
- 2017.10.28.(토) 청소년의회 홍보 및 정책참여 부스 운영
- 2017.11.18.(토) 청소년의회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 2017.12. 청소년의회 평가 및 2018년 계획 수립

마. 고양시청소년의회 활동사진



오리엔테이션



의회 위촉식 및 기본교육(의장후보 정견발표)



의회 위촉식 및 기본교육



자치기구 연합워크숍



국회체험



본회의 준비

Ⅱ. 고양시 청소년 자치기구 소개

① 고양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가. 고양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추진 배경 및 목적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기반으로 고양시 운영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치기구로써, 고양시 청소년들을 대표하여 청소년 활동과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고양시에 직접 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

나. 고양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모집

- 1) 모집방법 : 공개모집 및 추천(사회배려청소년)을 통한 선발
- 2) 모집기간 : 2017.02.24.~03.23.

다. 고양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구성

- 1) 인 원 : 고양시 청소년(만9세 이상~만24세 미만) 30명
- 2) 성 비 : 남자 16명, 여자 14명
- 3) 지역분포 : 일산서구 7명, 일산동구 11명, 덕양구 12명
- 4) 연령분포 : 만 13세~15세 9명, 만 16세~18세 14명, 만19~24세 7명
- 5) 교육분포 : 중학생 9명, 고등학생 14명, 대학생 6명, 학교 밖 1명

라. 고양시청소년의회 활동 현황

- 2017.03.25.(토) 청소년차세대위원회 위원 선발 면접
- 2017.04.01.(토) 청소년차세대위원회 오리엔테이션
- 2017.04.08.(토) 청소년자치기구 연합발대식
- 2017.05.13.(토) 정기회의 및 관계형성
- 2017.05.20.(토) 정책제안교육
- 2017.06.03.(토) 대표이사님과의 만남
- 2017.06.05.~08.03 정책제안활동
- 2017.08.04.(금)~08.05(토) 자치기구 연합워크숍 (1박2일)
- 2017.08.10.(목) 2017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최우수상 수상)
- 2017.08.12.(토) 세계청소년의 날 부스운영
- 2017.08.19.(토) 청소년차세대위원회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계획
- 2017.08.20.~09.09 정책제안 체계화 활동
- 2017.09.01.(금)~02.(토) 청소년참여위원회 전국대회 참가
- 2017.09.09.(토) 청소년 의회 '본회의'
- 2017.10.28.(토) 청소년차세대위원회 홍보 및 정책참여 부스 운영
- 2017.11.18.(토) 고양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
- 2017.12. 청소년의회 평가 및 2018년 계획 수립

마. 고양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활동사진



자치기구 연합발대식



정책제안 교육



대표이사님과의 만남



자치기구 연합워크숍



세계청소년의날 부스운영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Ⅲ. 고양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정책제안서

① 인권분과 [고양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정책]

- 정책제안자 : 방재현, 이윤성, 이중곤, 김서진, 이승준

현재 고양시에는 청소년들의 노동 피해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나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경기도 본청을 포함한 32개의 도·시·군 중 6개(경기도, 군포시,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안양시)의 지자체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직접적인 조례가 존재하였다. 고양시와 근접해있는 의정부시에서도 올해 들어서 청소년 노동권익과 관련된 문제들을 인지하기 시작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발의자 중 한명인 권재형 의정부시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청소년의 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과 관련된 고용계약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정부시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근로환경개선과 인권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고양시의 청소년 인구는 약 21만으로 의정부시의 전체인구가 44만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며 관내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인권과 관련된 피해들이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적을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노동 인권을 침해 당했을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센터”), 고양시 청소년 알바지원센터(이하 “알바센터”) 등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십계명 · 노동법 교육 · 노동인권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 및 자원의 한계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대하여 힘들어하고 있고, 행정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활동하는 것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인권분과에서는

1. 고양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실태파악
2. 고양시 민·관 업무협약을 통한 역량강화
3. 고양시 비정규직센터와 고양시 알바센터의 사업 및 노동 상담 홍보
4. 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 단지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인적, 물적 및 이외의 지원
5. 고양시에서 발표한 청소년이 포함된 사회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제정 촉구

등의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

1. 고양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실태파악

통계청에서 발표한 “행정구역(시도)/연령별 경제활동인구”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15-1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02/04 기준 7.6%에서 2017/02/04 기준 약 12.7%로 올랐으며 5년간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올해에 실시된 경기북부노동교육센터의 '경기도청소년 근로인권 실태조사 중 아르바이트 현장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참여한 1040명의 학생 중 약 40% 이상이 청소년 노동인권 에 대한 기본적 규정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 말은 본인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여 노동을 지속하는 청소년들이 존재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경기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2장(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 5조 1항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따라 현재 보호센터 건립을 검토 중이며 센터가 건립될 경우 제2장 6조(사업)에 의거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기도에 센터가 건립되어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고양시에서도 실태파악을 위해 데이터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보다 앞서 조사하여 자체적으로 매년 피해 비율 변동사항에 대하여 집계할 것을 제안하고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 비용, 인력 그리고 각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고양시청 여성가족국에서 책임지고 전담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에 대해 파악할 것을 추천한다.

2. 고양시 민·관 업무협약을 통한 역량강화

창원시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직접 나서 창원시청-교육지원청-지방노동청 등의 업무협약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정보 공유와 교육 및 정책에 대해 더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고양시는 이를 좀 더 발전시켜 벤치마킹하여 민·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함께 풀어나간다면 교육과 정책에 있어서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1장 3조 ②항에 따라 “도지사는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라는 법적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월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고양시에는 이러한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않지만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31개의 지자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고, 고양시장이 직접 나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양시 비정규직센터와 고양시 알바센터의 사업 및 노동 상담 홍보

비정규직센터의 경우, 청소년과 관련 사업으로는 법률상담 및 지원, 학교에 찾아가 노동인권 교육 및 캠페인 활동 등이 있다. 법률지원은 나이를 불문하고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인권 교육의 경우 학교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실업계와 인문계를 불문하고 일산고·신일비즈니스고·일산국제컨벤션고·대화고·고양예고 등에서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실업계 학생들의 경우, 실습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십계명·

아르바이트 시의 성희롱 유형 및 각 업종별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리된 매뉴얼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노동을 하는데 있어서 인지해야 할 중요한 부분을 교육하고 있고,

알바센터의 경우, 모든 사업들이 청소년들을 위주로 진행되며 24시 전화상담소 운영과 함께 고양시에 위치한 다양한 청소년 공간에서의 이동상담 운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블루존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블루존 사업을 좀 더 이야기하자면, 청소년 십계명을 준수하는 사업장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착한가게를 의미하는 뜻으로 올해에도 고양시 관내의 여러 상점들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이 포함된 조사원들이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평가를 진행한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선정(임금체불X), 될 수 있으며 선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사장과 함께 블루존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노동피해 대처 매뉴얼 리플렛을 제작하고, 업무협력을 통해 분기마다 학교나 고양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 캠페인 활동을 벌여 봉사시간을 부여 및 참여율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4. 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 단체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인적, 물적 및 이외의 지원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 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고양종합운동장내 A-26
직원 수	2016년 2명 → 2017년 3명
고양시 지원금	2016년 1억 → 2017년 2억
위·수탁 기간	3년 (재계약을 거쳐 2014~2019년까지 운영)
진행사업	고등학교 찾아다니며 캠페인 및 강의 진행, 법률지원,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

자료제공-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비정규직센터의 경우, 작년에 비해 상황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캠페인 및 찾아가는 상담소 등을 운영하면서 재원과 인력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관내에서 스케줄이 잡힐 경우 자차를 이용하여 짐을 실어 나르고 있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업무특성상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2012-07-09에 진행된 환경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에 대하여 성과를 더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대화가 오고갔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계류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고양시 산하에 있는 유관기관이지만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 5년이란 시간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면 고양시에서 비정규직센터를 존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현재 계류되어 있는 법적 명분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고양시 청소년 알바 지원센터	
위 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35 능곡역 4층 청소년 '놀러와' 카페
직원 수	2명 내외
고양시 지원금	3000만원 → 1500만원
위·수탁 기간	1년 (2011년부터 사업 진행 중)
진행사업	블루존 착한가게 선정, 24시 상담, 청소년 공간 내 이동상담소 운영,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진행

자료제공 - 고양시 청소년 알바 지원센터

알바센터의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점점 낮아져 3000만원에서 시작했던 예산이 1500만원까지 삭감되어 현재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마저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진행하던 사업들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여러모로 힘든 상황을 직면하고 있고 위·수탁 기간 또한 1년으로 다른 곳들에 비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사업을 실행함과 유지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기반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이 힘들 것이고 청소년 노동인권에도 있어서도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접 방문해 본 결과, 능곡역 청소년 카페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방문하기에 좋은 장소이나 독립적인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청소년 공간을 센터 사무실로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혼잡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단체에 대한 지원금 확충과 함께 알바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위·수탁 계약기간 연장, 비정규직센터의 계류되어 있는 조례안 재검토를 제안한다.

5. 고양시에서 발표한 청소년이 포함된 사회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제정 촉구

고양시에서는 청소년이 포함된 “고양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하여 법적장치가 없는 고양시에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좋은 효과를 내고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들이 이야기되었으면 좋겠다.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고양시, '노동을 존중하는 고양시 만들기 박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맞춤형 노동정책 추진에 앞장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기자 | 입력 : 2017.03.31 09:54

기사 | 소셜댓글(0)

기사공유 | + | -

고양시(최성 시장은)는 '노동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고양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올바른 고용노동정책을 통해 좋은 일자리와 노동환경을 창출하고 나아가 좋은 기회 나눔과 노사 간 나눔을 이끌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양시 맞춤형 노동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노동권익 향상 ▲노동인권 존중 ▲근로환경 개선 ▲노동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대화소통기구로서의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고양형 노동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기본계획은 '노동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도시, 고양'을 정책비전으로 지역 근로자 노동기본권 증진과 좋은 일터 만들기의 2대 정책목표 및 ▲계층별 노동기본권 증진 ▲노동자 복지시설 구축 ▲고용의 질 개선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의 4대 정책분야를 설정했으며 25개의 단위과제 및 세부 실천과제를 담았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여성 청소년 노인 및 저임금·비정규직근로자 등 상대적 취약근로계층의 노동기본권 증진을 최우선으로 근로분야별 노동문제 전문상담 지원과 노동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동교육의 실시를 확대추진 한다.

또 지역 특화산업을 반영한 업종별 근로가이드 제작과 근로환경기준 가이드 수립, 중장기적인 복지시설 구축을 통해 지역근로자들의 소통과 휴식, 재충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안정과 적정임금 지급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확산에 힘써 고용의 질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형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타당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금년도에 '고양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노사단체,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매년 기본계획을 보완함으로써 실천력 있는 노동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결방안 및 기대효과

1. 고양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실태파악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여 중간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을 위해 시급한 정책을 수립하여 매년 통계를 낸다면 노동인권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된다.

2. 고양시 민·관 업무협약을 통한 역량강화

민·관 협력을 통해 거버넌스로 풀어내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예시로 창원시의 경우, 법적근거인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및 보호 조례 제정과 함께 창원시장이 적극 나서 시청-지방노동청-교육지원청 등 업무협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창원시는 협력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예산지원, 실태파악, 교육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도 협력을 통해 교육지원청의 지원과 함께 수월한 노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겹치는 경우 협력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창원시에서 이루어질 사업으로는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실태 진단 및 정책개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아르바이트 청소년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 ▲청소년 근로자 3대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캠페인 및 교육 실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구제 홍보용 포켓용 수첩 제작 등이 있다.

3. 고양시 비정규직센터와 고양시 알바센터의 사업 및 노동 상담 홍보

청소년들이 자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인지하고 참여할 경우 당사자들이 직접 주도하여 함께 할 수 있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을 시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4. 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 단체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인적, 물적 및 이외의 지원

알바센터의 경우, 위·수탁 기간이 늘어날 경우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비정규직센터의 경우, 계류되어 있는 조례가 처리될 경우에 법적근거가 생겨 탄탄한 명분 및 지원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고양시에서 발표한 청소년이 포함된 사회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제정 촉구

노동인권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 고양시에서도 2017년 4월, 청소년이 포함된 사회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하루 빨리 약속이 지켜져 법적근거가 마련되길 바라고, 조례 제정 이전에는 알바센터와 비정규직센터에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된 확실한 업무 분배와 함께 예산을 증액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강의 및 캠페인, 이동상담소, 블루존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에 대하여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양시 차원에서 직접 나서 시청-지방노동청-교육지원청-비정규직센터-알바센터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인 실태조사, 교육, 캠페인, 피해자 구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고양시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다른 지자체들이 우리 고양시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노동권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또한 노동인권을 보장 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고양시에 현실적인 방안이 하루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② 교육분과 : 고양시 청소년이 알아야할 권리

“다 함께 만들어가는 성교육”

- 정책제안자 : 김태현, 김도현, 최빈, 강문성, 김홍민, 임선정, 장귀주

현재 고양시(경기도 교육청 조례안이 준하여 진행)에는 청소년들의 성교육 대한 공식적인 성교육 진흥 조례안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이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내용이 폐쇄적이고 실제로 필요한 피임이나 성관계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무조건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원론적인 강의뿐, 그것을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성교육이 형식적이고 연령대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진행되는 성교육들은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지만 무의미한 시간으로만 버려지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성교육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을 시작으로 [고양시 청소년 성교육 확대 및 증진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교육은 고양시에 위치한 각 학교마다 실행은 하고 있지만 점점 성교육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해지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받는 학생들조차 일관된 성교육 방식과 항상 동일한 성교육 내용으로 인해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태입니다. 실제 청소년들이 이성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피임법이나 성에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청소년시기에 임신을 하고, 미혼모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성에대한 지식과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 정책을 제안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학급별로 강사를 파견하는 성교육을 제안할까? 강의형이 아닌 참여형 토론편식으로 제안해볼까? 일부 외국에서 시행되는 있는 부스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게 제안해볼까? 그러나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현재 고양시 학교이 성교육 현황을 조사하면서 저희는 “성교육 UCC대회를 통한 성교육 영상보급”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양시 관내 청소년들과 학교선생님(보건)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현재 많은 학교에서(특히 고등학교) 한 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에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첫째 예산이 부족한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입시위주의 우리나라에서 성교육(보건)과 관련된 시수를 배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높다는 것입니다. 학급별 외부 강사파견을 통해 참여형 프로그램을 많이 보급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지만, 성교육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청소년 스스로가 느끼고, IT사용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짧은 시간에도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UCC라는 매개체를 선택하였습니다. 성교육UCC대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성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가는 배경입니다. 성교육은 학년별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가치관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교육 UCC를 단계별로 직접 제작, 공유하면서 청소년들이 만드는

UCC인만큼 그 영상물을 보는 청소년들에게도 더 이해가 쉽고 더 가까이 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고양시 청소년들의 성교육 실태파악

고양시 청소년들의 성교육 실태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이다. 성교육 내용이 폐쇄적이고 실제로 필요한 피임이나 성관계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무조건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원론적인 강의뿐, 그것을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을 받는 학생들조차 일관된 성교육 방식과 항상 동일한 성교육 내용으로 인해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태입니다. 다음은 WIKITREE기사에 실린 내용중 OnStyle ‘바디액츄얼리’ 프로그램에서는 피임과 성교육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이날 산부인과 전문의 류지원 원장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사랑하면 지켜봐주세요’라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에 앞서 제작진은 피임에 관한 질문지를 만들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피임법에 대해 잘못 알고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 성인들도 성교육을 잘 받지못해 피임법에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디액츄얼리’라는 프로그램에서 성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는 방송을 방영한 것을 보면 성교육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동운 삼성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연구팀이 청소년 21만2,5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이 있는 10대 청소년 중 절반이 피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성관계를 시작한 평균 연령은 12세였으며 콘돔과 같은 피임 실천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청소년들의 성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관내 4 개 학교 대상으로 조사한 사항입니다.]

성교육 실태	문제점
1. 상반기 2시간, 하반기 2시간(성폭력 2시간, 성매매 1시간, 가정폭력 1시간) 2. 현재 강사를 초청해 시청각실에서 강의를 하고 전 학년이 모니터로 강의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이다. 하지만 한 학년당 성에 관련해서 모든 교과시간이 15시간인데 정작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다.	1. 한 반에 강사선생님 한분씩 모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예산이 부족하고 영상시청이 지루하고 항상 같은 내용이며서 도움이 안된다는 걸 알지만 현재로서는 영상교육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2. 보건선생님 한명이 모든 반을 돌아다니기가 시간확보 측면에서 어렵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해봤지만 보건실 운영과 수업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10분만에 아픈

<p>3.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p> <p>4. 해마다 시행하는 방법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p> <p>5. 어느해에는 강사가 각학급마다 들어가는 경우, 한명의 강사가 방송교육을 하는 경우, 동영상으로 시행하는 경우</p>	<p>친구들을 다 세세히 봐주기도 힘들었고 응급상황으로 온 친구들 같은 경우 대처하기 어려웠다.</p> <p>3. 성에 관련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교육부에서는 예방교육을 똑바로 했냐고 학교 측에 물어보는데 예산도 없는데 계속 교육을 하라고만 하니까 이래저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다.</p> <p>4. 안되는 가장 큰 문제 2가지다 1) 예산의 문제 2) 시간조율의 문제 (상대적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수 자체를 많이 넣기 어렵고, 진행을 하더라도 한번에 많은 반을 수용하는 강사 또한 쉽지 않다)</p> <p>5. 강사마다 수업의 질이 다 다르다</p> <p>6. 초등, 중등 대상으로 했던 강사의 경우 고등학생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지루한 경우가 종종 있다</p>
---	---

2. 고양시 청소년 성교육에 대한 인적, 물적 및 이외의 지원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조례에 나와 있는 8조에 근거하여 현재 고양시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 위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있는 모든 학교가 돌아가며 공평하게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양시 전체 학교로 확대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9월에 사업이 종료한다고 합니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성교육 예산비용

고양시에 위치한 학교	여성가족부
<p>대략</p> <p>-60만원</p> <p>-교직원 포함 99만1000원</p> <p>-1년 성교육예산: 80만원</p> <p>(학생교육:60만원+교직원교육:20만원)</p>	<p>-맞춤형 성인지 교육 초, 중, 고 <보조> / 올해 600만원</p> <p>-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 4500만원 (8~90% 청소년에게 쓰임)</p>

3.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또는 사업, 아이디어) 내용

위에 제시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자신들이 직접 알아보고 지식을 쌓기도 하며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성교육(성인지 변화)을 위한 UCC대회 개최를 정책제안으로 정했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에 대한 도움여부를 설문조사 해본바 과반수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항상 같은 성교육, 성의 없는 성교육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모두가 공평하게 성교육을 받고 정확한 성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정책제안을 합니다. 고양시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대한 더 확실한 참여를 이끌자는 것입니다. 고양시에서 성교육UCC대회를 개최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함께 성교육UCC대회에 참여해 연령대별 수준에 맞는 내용 제작하고 성에대한 지식을 알릴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들어 우수작품 시상 및 교육청 협조를 통한 관내 학교 배포합니다. 성교육UCC대회에서 우수한 작품들과 최우수작품은 함께 힘을 모아 더 전문적이고 정확한 성교육 영상물을 제작해 성교육시간에 고양시에 위치한 각 학교 마다 시청하게 합니다. 청소년들이 성교육 영상물을 만들게 된다면 성교육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더 쉬운 이해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청소년 스스로가 느끼고, IT사용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짧은 시간에도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UCC라는 매개체를 선택하였습니다.

4.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사업) 의 기대효과

청소년들에게 성에대한 혼란과 올바른 성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성교육UCC대회를 통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고양시뿐만 아닌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에게까지도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성에 대해 인식하여 건강한 성평등 개념을 확립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임신 비율과 성범죄율이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성교육 UCC대회를 통해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기존의 방식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성교육UCC대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성에 대한 인식 변화시키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문화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영상 등 온라인 보급으로 청소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UCC에 참여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에게도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청소년들에게도 메시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각급 학교에서 성장기의 학생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에 대한 학생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생물학적·사회적 역할, 도덕적·윤리적 인성교육 등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발달 단계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각급 학교에게 모든 학생이 올바른 성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시간을 30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성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 성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
 4.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5.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자원 및 자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등)

-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어 제작되어야 같다.
 1.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가이드 라인 제시
 2. 성교육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성교육에 관한 충분한 영상자료가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
 4.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집중교육)

- ① 교육감은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성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집중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받기 위하여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
 2.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사항
 3.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집중교육에 대한 사항

4.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학생 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성교육 관련 각급기관·단체의 관계자
 3.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 및 관리자
 4. 경기도의회 도의원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

-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진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등)

-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성교육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문화분과 : 정치인과 청소년 만남의 광장!

정치인과 함께 하는 토크(TalkTalk)

- 정책제안자 : 김민제, 김한솔, 선예지, 오시연, 이기원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2015년에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선거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전국 고등학교 17개교를 대상으로 1,43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에서 현행 투표연령을 만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65%가 찬성을 답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위원회에서 고양시에 살고 있는 150명의 청소년들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70%이상이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70%이상의 청소년들 중 일부는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정권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정치인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60%의 청소년들이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고양시 청소년 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과 정치인이 만나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다당체제인 현 시대에서 다양한 정치인들에게 강연을 들으면서 정치적인 소양을 기르고 올바른 정치적 이념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남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하는 학교 같은 공적인 곳에서는 청소년과 정치인이 대화를 통해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할 경우, 정치인과 청소년들의 형식적인 대화를 이끌어가거나 학생들이 도구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양시 청소년 차세대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여 강연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토크콘서트의 형식의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청소년들의 욕구를 대변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고양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청소년과 정치인과의 만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만남이 진행되는 시기는 청소년의 달인 5월이나 방학기간인 7~8월으로 제안합니다.

2017년 청소년 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더불어 정치참여는 활발해지고 있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저해한다는 결과가 나온바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학업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5월이나, 7월(시험기간 고려)에 정치인과의 만남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런 시간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청소년과 정치인의 만남을 진행한다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확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을 기획하기 이전, 청소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요구에 따라서 만남의 주제에 맞는, 청소년들이 만나길 희망하는 정치인을 우선순위로 섭외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참여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실내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론회뿐만 아니라 길거리 게릴라콘서트, 간식 토크 등 청소년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과의 만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도 청소년들이 스스로 한다면 더욱 의미 있고 청소년들의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정치인들은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음을 확인인 할 기회가 되어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청소년들의 요구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생각해보고, 제안함으로써 청소년의 의견을 토대로 간접적 정치에 대한 참여 및 인식의 개선을 기대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정치에 대한 쉬운 접근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정치적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의 활성화와 사회적 참여로써 고양시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③ 문화분과 : 금연벨을 올려라!

- 정책제안자 : 김민제, 김한솔, 선예지, 오시언, 이기원

청소년으로 보여 지는, 또는 교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더더욱 담배를 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으며 길거리 · 횡단보도 · 공원 · 골목길 등 장소를 불문하고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무분별하게 간접흡연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은 두 가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하나는 흡연자가 담배연기를 들이 마신 후 내뿜는 연기를 마시는 것, 다른 하나는 타고 있는 담배에서 바로 나오는 생 담배연기를 마시는 것입니다. 생담배의 연기는 독성화학물질의 농도가 2~3배 더 높고 입자 크기가 매우 작아 폐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 흡연가능성이 1.5배~2배 이상 높고, 호흡기 증상, 폐기능손상 등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청소년의 흡연뿐만 아니라 길거리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요즘 ‘흡연 없는 거리’, ‘금연 스티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공장소나 길거리 흡연금지에 대한 캠페인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흡연에 대한 공공장소 인식변화 및 제재를 위해 2015년도에 금연벨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의 ***구의 경우, 2017년 8월 30일을 기준으로 20개 중 5개가 작동하지 않고 5개의 경우 사용하기 부적절한 곳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문화분과에서 현장을 찾아 조사한 결과, 작동하지 않는 금연벨 5개의 공통점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으며 대부분 공원이나 광장 등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하기 부적절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5개의 경우, 여자화장실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거나 스피커가 부착되어 있는 기둥에 벨이 같이 존재했으며 심지어 한 기둥에 두 개의 벨이 달려있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인 보건소에서도 금연벨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설치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자체의 홍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금연벨에 대한 관리는 고양시 안에 있는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연벨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각 보건소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본 결과,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있는 담당 직원도 있었고, 설치된 장소의 지도나 메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도 존재하였습니다.

한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도는 존재하지 않았고 **역에 몇 개, **공원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분포표로 되어 있어 저희 차세대위원들이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나가서 금연벨을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입장으로 찾아다니면서 이용해 본 결과, 금연벨의 설치 장소에 대한 정보가 부족으로 인해 찾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도 개인 프라이버스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금연벨은 공공장소와 같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벨을 눌러 흡연자가 흡연행위를 중지(권고)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정보 부족, 미작동,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미흡 등의 이유로 금연벨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부적절한 위치로 인하여 불안함에 사용을 꺼리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금연벨을 올려라”라는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

1. 금연벨의 현황 상태파악 및 부적절한 곳에 부착된 금연벨 위치 변경

고양시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는 금연벨의 현황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지 재검토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산동구의 경우 20개 중 5개가 배터리가 모두 소진되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하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정발산공원, 중산공원, 호수공원 등에 부적절하게 부착되어 있는 금연벨의 위치를 수정합니다. 또한 청소년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금연벨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2. 캠페인과 홍보를 통한 금연벨 이용의 활성화

차세대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시민의 77%가 금연벨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양시에 2015년 금연벨이 설치된 이후에 5~6개의 인터넷 뉴스를 통해 홍보하였지만 104만 시민들에게 알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양시 통합읍 보건소 부분에 금연벨의 상세한 위치를 지도로 등록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금연벨 근처에서 청소년들이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금연벨 알림 캠페인과 금연 캠페인 등을 펼치면서 금연벨 사용율을 높이고 흡연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1. 금연벨의 현황 상태파악 및 부적절한 곳에 부착된 금연벨 위치 변경

현황 상태를 파악하고 배터리를 교체한다면 원활한 사용을 통해서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곳에 부착된 금연벨 위치 수정을 통해 시민들이 이전에 비해 더 안전하게 금연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설치된 금연벨들을 통해 사용률을 높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과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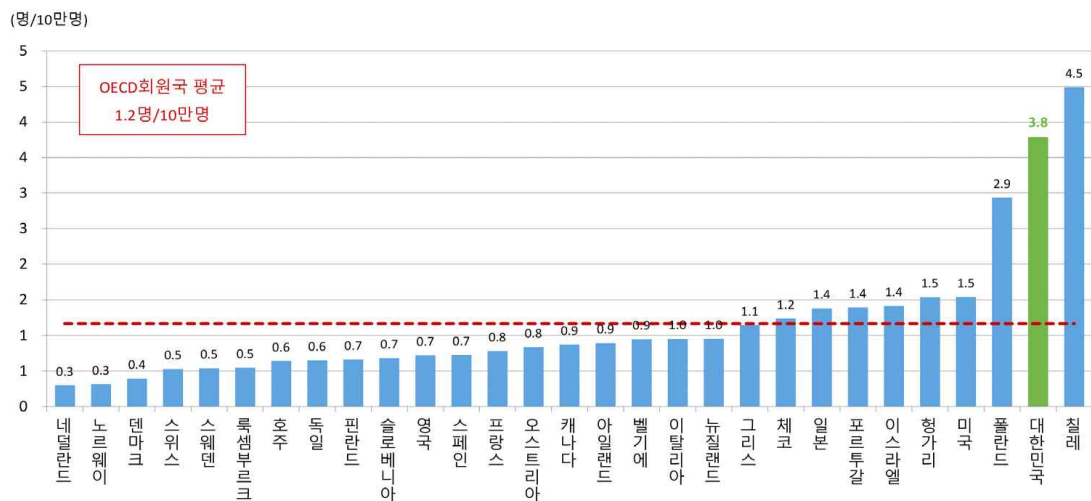
2. 캠페인과 홍보를 통한 금연벨 이용의 활성화

고양시 공식 통합앱 보건소 부분에 금연벨 설치장소에 대해 보기 쉽게 지도로 안내한다면 누구든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도움을 통해 청소년들이 함께 거리로 나가 금연벨을 홍보하고 금연 캠페인 등을 펼치며 청소년의 자치참여를 도모하고 흡연율을 낮추며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시민들에게 문제를 일깨워주고, 간접흡연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불건전한 흡연 문화를 예방하여 청소년들에게 흡연 문화에 대한 인식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금연벨이 활성화 된다면, 고양시의 좋은 사례가 되어 고양시민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④ 안전분과 : 바닥신호등

- 정책제안자 : 김현지, 김승환, 전민경, 최수연, 남서하, 구예준, 이소민

고양시청소년차세대위원회 안전분과에서는 건널목 안전 및 이를 위한 바닥 신호등 시설물 설치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6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율은 OECD 인구 10만 명당 3.8명으로 1.2명인 OECD 34개국 평균의 3.16배를 상회하며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고양시 역시 인구 10만 명당 연간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율은 평균 5.5명으로 교통안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 및 대책이 강구되고 있으나 교통사고율은 여전히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료 : <http://stats.oecd.org>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 (OECD 인구)

교통사고율 증가에 관하여 다양한 원인들이 지적되고 있으나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10대 청소년에서 30·40대 청·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만연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문화입니다. 최근 5년간 스마트폰 관련 차량사고는 2010년대 초반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연간 1,000건 이상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화로 인한 안전 문제의 가속화에 우려를 표하면서 국민안전처 또한 2016년부터 교통사고 통계에 “휴대폰 사용 중” 보행자 사고 항목을 추가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 기업의 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보행자가 소리로 인지하는 거리가 평소보다 40~50% 줄어들고 시야폭은 56%가 감소되며 전방주시율은 15%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계층이 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만연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문화는 이들의 교통약자로서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잘못된 스마트폰 사용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보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의 선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교육의 효과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와 동시에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고안하고 마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차세대위원회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고양 시내 버스중앙차로 및 학교 인근 등 스마트폰 이용인구가 많은 지역을 시범 대상지로 설정하여 바닥신호등의 설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바닥신호등이란 노면의 점자블록 등에 LED 조명을 추가하고 이를 일반 신호등과 연결하여 교통 신호를 표시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신호 대기 및 횡단 간 보행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유발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고안된 장치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설치된 '바닥신호등'

최근 영국, 독일, 벨기에, 호주 그리고 일본 등에 위치한 해외의 여러 지자체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바닥 신호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LED를 활용한 대안적인 교통 신호 장치의 효과성은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는데 특히 일본의 경우 교차로 바닥 신호등을 통해 야간 교차로 차량사고를 60% 이상 감소시켰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 등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바닥 신호등의 도입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바닥신호등' 사례

바닥신호등은 스마트폰 사용자뿐만 아니라, 신장이 작아 신호등을 주시하는데 곤란한 노인 및 어린이 인구에게 눈높이에 맞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함으로써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바닥신호등은 가외성을 갖고 있는 장치로서 주 신호등의 장비 결함 등 유사 상황에서의 일반 보행자 모두의 교통 생활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스마트폰 사용자들 스스로 올바른 사용 방법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 개선과 병행하여 안전장치들을 도입할 수 있다면 보다 건강한 안전 문화를 조성해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설치를 통해 사고 예방의 효과와 보행자의 안전 편의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교통사고 없는 고양시, 교통 선진지 고양시를 희망합니다.

주) 6m 폭의 횡단보도 대상으로 설치 시 초기 설치비용은 800만원. 교차로의 경우 3200만원 가량. 다만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저렴. 전기료 연간 10만원 이하. 내구성 우수 10년 이상 사용.

Ⅳ. 고양시청소년의회 5분 자유발언

① 인권분과 : 학원폭력(김다운 의원)

요즈음 부산, 강릉, 인천 등 여러 곳에서 학교폭력의 심각한 실태가 드러나게 되면서 온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혹한지는 모두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원폭력에 대해서는 알고계십니까? 학원은 학교와 같은 사전적 정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학원폭력이라고도 일컫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학원폭력을 검색해보면 흔히 인식하고 있는 학원의 개념과는 다른 학교의 의미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학원이란 사설교육기관의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국민 대부분이 필요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안과 그 법에 따른 제도적 방안이 마련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설문조사, 상담제도 등을 사설교육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 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한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 개념으로 학교 내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피해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설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피해도 학교폭력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학계나 언론에서 다루는 학교폭력을 조사해보면 '학원폭력'이란 명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학원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사설교육기관의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설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실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히 사설교육기관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인이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설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미연에 방지하기에 제도적으로 매우 미흡합니다. 보통 보복이 두려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학교에서 학생들 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생님께 알리거나 선생님이 직접 파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아정체감이 완벽하게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중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리기관인 사설교육기관에서는 선생님들이 국가기관의 학교보다 학생들의 문제에 덜 신경 쓸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사설교육기관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학생들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폭력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설교육기관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베풀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입시결과물이 학원의 존속을 좌우하기 때문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생들을 혹사시키거나 예체능입시학원 같은 경우 학생들에 대한 폭력, 폭언, 성추행 등의 인권침해가 심심치 않

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설교육기관에 대한 조사가 부재하고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수치를 정량화하기가 힘듭니다.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리기관에서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건 수입과 직결 되어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을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설령 학교에 비해 문제가 덜 발생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폭력을 당한다면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은 평생 가슴 속에 상처를 간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가슴 속 상처는 어떤 것으로도 보상하기 힘들고 그 아픔은 크기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갖습니다. 따라서 법을 준수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단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에 따라 사설교육기관에 대한 조사 및 연구기관 설립을 제안합니다. 모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에 힘써주시고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빛날 수 있도록 고양시가 다른 도시들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② 교육분과 : 자유학년제(김민제 의원)

저는 오늘 자유학기제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유학기제는 중학생들이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토론과 실습 등 참여 위주의 수업을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정책입니다. 오전에는 교과과목을 수업하고, 오후에는 주로 진로탐색활동,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는 1학년2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그만큼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지필고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단원평가와 쪽지시험을 보기 때문에 학생들은 따로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러면 다음 학년에 수행해야 할 공부의 성취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더욱더 사교육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유학기제 성과로 중학교의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가 노린 건 바로 이것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계속 늘고 있지만 중학교는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교육부 자료에 이하면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4.5% 오른 월 24만 천 원, 고등학교는 10.9% 오른 26만 2천 원인 반면에 중학교는 0.1% 감소한 27만 5천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사교육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중학교의 월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 주당 참여시간이 모두 전년대보다 줄었다며 자유학기제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국영수 교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 의존도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언론들이 꼭 써주길 바라며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생들이 특목고 준비 등을 위해 사교육에 매달리면서 고등학교 사교육비보다 오히려 지출이 더 많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부족한 학업을 스스로 채워야 하다 보니 학생들은 피로감을 더 느낄 것입니다. 또한 자유학기제를 하다가 다시 예전의 학교생활로 돌아갔을 때 학생들은 적응하기 어려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학교는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 자신의 공부습관을 잡아 놓아야 하는 놓칠 수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학생들이 말할 자유학년제의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는 바로 제한적인 환경과 미숙한 수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한적인 환경의 문제는 학생들의 진로와 재능을 위한 수업이 교실이라는 좁은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학생들의 진로와 재능은 다양하지만 이를 개발해나가는 과정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발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현재 진행되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및 수업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유학년제가 처음 시도되면서 학교와 선생님들께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유학년제 예체능 탁구 수업에서는 담당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탁구를 가르치시 않고 수업이 진행되며 3개의 교시 동안 별다른 활동없이 본 취지와는 다른 활동이 진행됩니다. 물론 이런 사항이 학교 재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재 고양시 청소년들의 진로와 재능의 개발을 위해서라면 한 시 빨리 대안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비슷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의 경우 1974년 첫 도입 1994년 본격 확대...2012년 아일랜드 중등학교 80% 참여하였습니다. 각 학교에 전문 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체험을 해보고 고용인에게 직접 평가를 받음으로써 많은 조언을 얻게 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학생들의 수업이고 학생들의 진로이기 때문에 교육의 선택권은 학생에게 주워져야 한다. 그리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의 시험 난이도를 낮춰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잘못된 교육을 실행하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그것에 관한 큰 추진이 없다. 시험의 난이도를 조금씩 낮춘다면 사교육위 활성화를 막을수 있을 뿐더러 학생들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볼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간편화 해야된다 생각한다. 무조건 작품만들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자신이 아는만큼 이야기하는 편안한 수업을 통해 그 아이의 실력을 평가해야한다 생각한다. 또한 수행평가 보는 시기를 고르게 분포하여 학생들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미흡한 우리나라에게 이러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일랜드 제도의 장점을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에 일부 수용하는 것도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아직 완벽히 자리 잡지 못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것은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경쟁과 치열한 입시환경만을 강조해온 우리나라가 학생들의 진로와 끼를 찾아주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학교와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최선을 다해 활동을 진행시켜야 하고 학생들의 책임감이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유학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힘쓰고 문제점에 대해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면 더욱더 발전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③ 문화분과 : 학교 내 자율동아리 지원(신지원 의원)

의원님들, 여러분이 다니시는 학교 내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일부 동아리 몇 개 이외에는 유령 동아리입니다. 왜 일까요?
저는 학기 초에는 많고 많던 학교 내 자율 동아리가 왜 유령 동아리가 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학교 내 자율 동아리비가 적다는 문제점이었습니다. 댄스 부의 경우 공연 시 옷을 사야 하고 한 학년 당 7명이라 어림잡아도 총 21명입니다. 학교의 턱 없이 적은 동아리비이다 보니 초반에 몇 번 운영하고 후에는 동아리 운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둘째, 비정기적인 동아리 모임 시간입니다. 학교 내 방과 후에 하는 자율 동아리이다 보니 담당 선생님이 계시지만 담당 선생님은 활동 일지만 관리 할 뿐 모임 시간이나 동아리 시간에 하는 활동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몇몇 학생들은 생활기록부를 위해 동아리에 이름만 올리고는 활동 하지 않게 되지요. 동아리비는 예산으로 측정되어 빠져나가므로 예산 부족이라는 문제도 초래합니다

셋째, 동아리를 위한 동아리실이 없습니다. 댄스부 같은 경우는 급식실 문 앞이나 태권도부가 활동하지 않는 날을 이용해 태권도부에서, 복도에 있는 위한 좁은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합니다. 과학동아리부는 같은 날 여러 개의 과학동아리가 있을 경우 두개의 과학동아리만 활동을 하게 되고 다른 과학동아리는 활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하나의 시간에 맞춰 모이는 동아리활동 시간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동아리 회비의 양을 늘리는 방법은 학생회나 선생님들께서 몇 번 이상 활동을 안하는 유령동아리나 동아리의 목적과는 다르게 다른 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찾아 동아리를 폐부시켜쓸데 없는 회비 지출을 막는 것입니다.

둘째, 비정기적인 동아리 모임 시간과 동아리실을 같이 생각하면 일을 좀 더 쉽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동아리에 맞는 동아리실을 만들거나 장소를 구합니다. 댄스부나 태권도부 같은 경우는 시청각실 앞이나 누리 앞에 거울 시트지를 붙여 거울을 볼 수 있게 하고, 밴드부는 방과후 음악실을 빌리고, 성악부도 방과후에 음악실을 빌리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해 각 동아리만의 동아리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댄스부나 밴드부 같이 비슷한 동아리가 많은 동아리일 경우 요일이나 시간대를 정해 한 장소를 여러 동아리가 돌려쓰면 조금나마 많은 동아리

에게 동아리실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리의 비정기적인 동아리 모임시간 또한 한 장소를 여러 동아리가 나누어 쓰면 각 동아리가 써야하는 시간이 정해지게 되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차세대 위원 여러분, 저는 위와 같은 방법들로 동아리를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면, 학교별 동아리 수도 늘어나고 다양한 종류의 동아리가 생겨 자신이 원하는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 교우관계,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취미와 적성을 찾아 미래 장래희망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④ 안전분과 : 고양시 청소년이 안전한 거리 (김태현 의원)

본 의원은 금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청소년이 안전한 거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등교→하교→학원→집이라는 일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을까요? 학원 시간에 쫓겨서 무단횡단 하는 것이 일상인 등하굣길, 학원을 다녀오는 길에 마주치게 되는 꺼진 가로등, 으스스한 주택가, 주점이나 유흥업소가 근접한 곳 등. 현재 청소년들은 시간이라는 틀 속에 자신의 안전을 담보로 맡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안전을 지키지 않는 이상에는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우리는 고양시 21만 청소년들을 위하여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안전이 보장되는 모습을 생각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들을 구체화하여 <고양시 청소년이 안전한 거리>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청소년이 지키는 안전

학교 등하교를 하는 동안에도 청소년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각을 면하기 위해 무단횡단 하는 학생들, 학교 입구가 좁아서 차들이 지나가는 곳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찔한 순간들을 일상에서 자주 겪다보니 어느 순간 안전 불감증에 노출되어 일부 학생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청소년 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주도하는 자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정책들이 대부분 학교 내부나 근처 문제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 학교 밖 울타리에 대한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학교 앞 정문처럼 근접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안전관리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교내가 아닌 교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학교에 큰 타격이 없다는 이유로 보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청소년들의 안전문제는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안전 활동범위를 늘리고 자치적으로 상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지원을 활발히 하여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회나 일부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 학생들이 안전지킴이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필요에 의해 상시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은 안전에 대한 보여주기식 행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청소년 안전 지킴이 활동에 봉사시간을 부과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받도록 합니다. 청소년 안전지킴이 활동을 위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안전관리 지역은 선정하고, 2018년에 고양시교육지원청과 학교 등의 협의를 통한 시범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이에 대한 효과와 개선점을 도출하고 청소년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을 지켜나가도록 합니다.

2. 청소년들이 안전한 거리 만들기 프로젝트

셉테드 활성화를 통해 평소에 다니기 어둡고 무서웠던 구석진 골목에 조명 설치와 벽화 작업을 통해 음산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포토존과 산책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버스정류장이나 금연 사각지대 같은 곳에 “간접흡연 NO!”와 같은 그림을 통해 메시지 전달하고 아

올려 안전한 거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이 봉사 활동에 대한 전문적 멘토링과 교육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청소년과 자율방범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하는 안전귀가 프로젝트

각 지역마다 지구대 및 파출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자율방범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주요 임무로는 범죄취약지역 순찰 및 현행범 체포 등 범죄예방활동, 관내 중요 행사시 질서유지 및 경찰 업무보조 등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청소년들이 함께 하여 자신들의 안전을 영위해 나갑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에서 부분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순찰이 시행되고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고양시에서도 적극 홍보하여 활성화시키고 이를 청소년 안전지킴이와 연계하여 순찰 경로에 의견을 내고 그것이 반영되어 더 자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기대효과

1. 학교의 단계를 넘어 지역사회가 유스존(YouthZone)으로 확대되어 청소년들이 관내에서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설문을 받아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하고, 이후에도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여 매년 안전과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며 범죄율은 낮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2. 청소년들이 다니기 어둡고 무서웠던 골목길이 사진을 찍고 싶은 장소와 산책하고 싶은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벽화나 그림에 메시지를 내포하여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써 지역의 문화를 살리는 열쇠로 작용할 것이고, 청소년이 포함된 시민들이 썬데드가 도입된 곳을 걸으면서 심리적인 안정과 여유를 찾을 수 있고 이전에 비해 범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부모님과 청소년을 연계하여 함께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가정과 사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들이 건의한 순찰 경로를 반영하여 추진한다면 기성세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도출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청소년에 의한 범죄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